

막내린
151회 국회

여성관련법안 모두 '물거품'

한목소리 못 낸 여성계, 다시 풀어야 할 숙제 많아

1991년 새해를 맞은 여성계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여성들의 정계진출에 든든한 기반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비례대표제가 백지화됐고,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의 <영·유아의 보호·교육법안>인 탁아법 강행처리, 세법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모두 물거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비애감'만 안겨 준 정국회

따라서 지난해 12월 18일로 막을 내린 1백51회 정기국회는 또다시 여성들에게 '약자'로서의 비애감을 안겨 주었다. 또 거대한 소외층을 이루는 여성들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한 '난장판' 국회는 어렵게 꼬인 실타래를 되풀이해야 할 짐만을 여성들에게 떠넘긴 셈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계로 하여금 새해벽두부터 '달걀로 바위치기' 격이 돼버린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 전락마련과 곧 열릴 임시국회에 대비한 탁아입법 개정안 제출, 세법개정운동을 바빠 시작해야 할 숨가쁜 일정속에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어떤 '결림돌'이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했고 1년간 무성했던 탁아논의, 세법개정의 노력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을까. 또 여성계는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여야협상 자체가 '민자당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는 암묵적 전제위에서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이미 '물 건너갔던' 사안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민당측의 설명은 이렇다.

"첫 지자체실시인 만큼 여성들의 진출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꼭 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민자당이 표면적인 이유로 공천행사시 오고갈 금전수수운을 하며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 평민당은 민자당이 내세운 반대이유가 사실은 비례제를 실시할 경우 평민당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안배됨을 우려, 열세지역의 평민당 진출을 막겠다는 의도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측은 '평민당이 여성을 내세워 비례제를 주장한 공공이속은 다른 데 있다. 세계 어디에도 비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민자·평민 모두 비례제가 채택되지 못한 점에 대해 상호비난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인상을 풍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를 놓고 한명숙

여성민우회장은 "원래 민자당의 입장자체가 정권유지에 일체의 손해도 안 보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쪽에 유리한 안정권 득표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난하고 "평민당측에서도 이를 끝까지 관찰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1야당에 대한 '신뢰상실'만을 여성들에게 안겨 줬다"는 평이다.

이런 현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민자당의 여성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따져서 비례제를 거부

하지 정당을 쫓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아쉬운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야당 통합문제가 결정되면 지자체 대비책으로 평민당 당규에 정해진 대로 각 기구의 20%를 여성들로 채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환경·소비자 복지 분야에 각각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여성의 입당 활동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인 활동 등을 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 실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여성계로서는 당장

형포'를 유감없이 발휘해 했던 민자당 탁아법의 날치기 통과로 인한 <탁아법 개정안> 제출.

'다수형포'에 무력했던 탁아입법 반대

그러나 한번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30년 이상 끌어왔던 가족법 개정운동에서 이미 보아 왔던 터라 이 또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가 되어 버린 상태다.

지난 1년간 그토록 무성했던 탁아논의가 '헛된 열불'이 되어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어쨌든 민자당 탁아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는 너무나 각계각층이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점과 스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한 것이 여성계의 힘까지 빼버린 결과가 됐다고 여성계 지도력의 문제점도 부분시인.

이처럼 탁아법의 강행통과는 "민자당이 선거를 앞두고 적체상태인 2만의 유아교육학계 인력을 탁아소내 프로그램에 '교육보강'을 명분으로 수용, 이들을

화·대중화되어 간다는 여성운동계의 자체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고 평하고 있고 올 해에는 지난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위에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하기도 했다.

대안제시 부족했던 세법개정 요구

이같은 바람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이룬 공동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증여·상속세 부과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세법개정운동을 펼쳤던 부분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세법개정 요구는 비례제나 탁아법과 달리 나름대로 일치된 목소리로 증여·상속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던 반면 대안제시에서 좀더 실현가능한 다른 방법도 모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평민당의 세법관계 한 전문위원은 여성계에서 세법개정을 요구하는 당면 근거로 개정민법(가족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논리비약으로 오히려 "민법내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속, 증여 개념 자체를 없애는 노력이 먼저"라며 민법상에 존재하는 증여·상속개념을 인정치 않을 경우 상속세법을 고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과 민법상으로 부부별산제(=부부공유제)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려면 현행 민법내 증여·상속개념은 그대로 둔 채 증여·상속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세법개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따라서 △민법내 부부간에 이뤄지는 증여·상속개념을 없애고 △예외규정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토록 요구해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매길 때는 남편사망과 동시에 남편재산의 절반이 부인 명의로 자동이전되게 하고 이혼시는 이혼등기로 재산이 자동반분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개정가족법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시마다 재산분할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재판을 거쳐야 하는 절름발이식 문제 해결방안이고 보면 빠른시일내 외국처럼 부부간의 증여·상속에 세를 부과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관찰시켜야 하는 전략상의 과제를 여성계가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적대로라면 여성계는 세법개정이나 탁아법개정은 물론 지자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좀더 지속적이고 일관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보다 고도화된 장단기 전략마련 △각각의 사안에 따른 치밀한 연구작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숙 기자)



탁아입법을 놓고 자기쪽 이해관계만 따졌던 일부 집단과 탁아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여성계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조정하면서 한목소리, 하나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한 데 대한 다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평민당에게는 애초 약속대로 끝까지 이를 관찰시키지 못한 점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케 하는 또다른 과제를 던지는 것이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야가 품고 있는 생각이 워낙 달라 처음부터 채택되기 힘들었다. 또한 비례제는 전국구처럼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팔수 있는 폐단도 사실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 남은 남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

평민당 박영숙 의원은 "13대 선거경험으로 미뤄볼 때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비례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라는 빅카드를 모두 놓쳐 버린 상황은 야당은 물론 여성의 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계가 여야지자체협상에 거대한 압력단체로서 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도 큰 유감"이라고 밝히고 민자당 여성의원 등을 겨냥, "어느 쪽에 속해 있건 정책을 선택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 비례제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남성들의 손에서 맥없이 날아간 것도 결국 여성표가 조직화되지 않은 점이라 할 때 △각 정당에 여성계가 공감하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되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우선적인 안배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여성공천'을 많이 하는 당에 여성표를 묶어 몰아주겠다'는 로비작전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회장은 "비례제가 안됐기에 진출폭은 크게 제한되었지만 공동전력을 마련, 집중적인 선거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선택이 최대의 딜레마"라며 큰 욕심없이 당선확실한 곳을 선택해 여성들이 연합전선을 펴면 소기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이 지적대로라면 여성계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여성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점은 '다수여당의

버린 것은 절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무릅쓰고 결함투성이의 규제성만 강한 졸속입법안을 강행한 민자당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탁아입법을 놓고 자기쪽 이해관계만 따졌던 일부 집단과 탁아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 등 핵심적 여성계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조정하면서 한목소리, 하나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미경 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은 민자당의 탁아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민자당이 다수의 반대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강행한 이유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동원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서둘러 강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민자당의 숨은 의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미경 씨는 "이런 구태는 중요복지법을 5공때처럼 정치적

선거조직 기반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와 함께 탁아법개정안을 어떻게 관찰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가족법개정 때보다 더 각 계층·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낸 이번 탁아법 논의의 교훈은 최소한 탁아문제의 본질에 인식을 같이 했던 지탁연 등 여성단체연합과 탁아제도와 어린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이 연합해 공동대처하지 못한 점에서도 찾아진다. 이들 여성단체나 학계 등은 각각 토론회를 따로따로 열거나 지난 12월 12·13일에 있었던 탁아법안소위원회에도 민자당탁아입법 반대 건의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끝나 버림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성계 활동을 지켜본 여성일자에서는 "지난 한해의 여성계 활동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여성운동이 전문화·다양